

# “우리아이들 피해 보는 사태는 막아야”

### 도의회 교육위,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나서... “사회적 약자 고통전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장명식 의원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면서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수개월째 지속된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으로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 힘들다”면서 “법률과 원

칙을 떠나 현실이 주는 고통과 불합리, 사회적 약자의 고통전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도 김승환 교육감의 주장대로 법률상, 재원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교사들로부터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기는 어렵다는게 상식이다.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장 의원은 “인건비 미지급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생계 위협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돌보이라는 중요한 일을 하는 교사들이 인간적인 삶과 생존권을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예산 편성 의지를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어떤 형태이든 추경을 통해 1,007억원을 전북교육청에 교부했다. 전북 누리과정 예산이 약 8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던 서울시 교육청 등도 이번 추경 교부금으로 누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는 10월 4일 어린이집 집단 휴일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극단적인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추경으로 확보된 교부금과 도청 전입금 등 재원이 있는만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휴식 중 2016 국정감사 나흘째인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휴게공간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휴식하고 있다.

## ‘김영우 징계’ ... 제2의 유승민 사태 우려 “황당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

새누리당이 29일 ‘국정감사 보이콧’ 당론을 거부, 국감을 개시한 김영우 국방위원장을 둘러싸고 ‘병어리 병가슴’을 앓고 있다.

친박계 지도부는 당 방침을 깬 김 위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겠다’며 징계 방침을 밝혔지만, 사태가 커질 경우 도리어 내분만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친박-비박 간 대결로 커질 경우 제2의 유승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비박계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대로 국감에 출석했다.

그는 “저는 그동안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 여러 차례 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방위마저 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냐”고 국감 복귀 의지를 밝혔다.

이에 친박계 지도부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이 국감에 들어간 것은 당론에 위배된 것이므로 책임을 물겠다”며 징계 방침을 선언했다. 이장우 최고위원 역시 “내가 지도부로 있는 한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김 위원장이 소신이 그렇게 강하다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오후 의총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 외에 비박계를 중심으로 다른 의원들도 국감 보이콧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분위기다. /뉴스

### 이호근 등 도의원들 “식량주권 기반상실 사태 초래할 것”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황당한 대책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

이호근 의원 등 전북도의원들은 2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황당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호근 의원은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유리하지 않아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용농지를 해제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은 물부족과 식량부족 국가로 다른나라의 원조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없이 당장 쌀 재고물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운운하는 것은 식량 주권 기반을 상실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8만5000ha가 해제됐고, 연말까지 1만 5000ha 농지가 추가 해제된다. /신광영 기자

### “특허청, 예산 27% 수의계약”

#### 조배숙 “수의계약 75% 특허청 산하기관”

특허청이 한해(2015년) 예산의 26%를 수의계약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수의계약 전문기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5년도 예산 5,235억원의 26.1%에 달하는 1,368억 2,495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올해도 8월까지 불품, 용역, 공사 등 계약으로 1,408억2,297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이는 올해 예산의 26.8%에 이르는 액수이며, 지금까지의 수의계약 액수를 감안할 때 올해 수의계약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허청의 수의계약의 75%가 특허청 산하기관이라는 것이다.

2016년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예산은 560.6억 원이며, 한국특허정보원 예산은 320.3억 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예산은 632.1억 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예산은 182.4억 원이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예산이 국고보조금 40억 원, 정부 용역과 수탁 591.9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청 산하기관 예산의 대부분은 특허청의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5년 동안 특허청 예산이 1,200억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비율이 오히려 27%를 육박하고, 대부분이 산하기관과의 계약인 것은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이 굳어진 것”이라며, “특허청은 수의계약을 통해 산하기관 운영 예산 총량이라는 욕심을 버리고, 모든 계약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추미에 “사드 반대 소신 변하지 않았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사드 배치와 관련, “(사드 반대) 제 소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표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사드 문제는 대통령이 터널 시야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저는 중국의 반발을 가볍게 보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드로 북핵을 막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국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며 “세계적으로 핵을 군사적으로 쫓는 나라가 있다. 다 공멸할 우려가 있어 군사적으로 풀지 못한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강경정책, 오바마의 전략적 무시 인내, 외교적 무능이 북핵 위협을 키웠다”며 “사드 배치보다 시급한 문제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폴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KAMD를 조속히 강화해서 실천배치 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하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 뒤, “남북관계가 풀어지며 북핵능력이 어디까지 갔는지 정보가 없다. (핵 능력의) 진화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청렴·한국·세상

###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가 시작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관철을까요?

각자 내면 문제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깨끗한 나라, 신뢰의 대한민국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공공 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무수행 사인(私人)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 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떠한 형태의 금품 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보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최소한의 금액 등은 허용됩니다.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다과·주류·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 원

- 선물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 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등 각종 보조금과 보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초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 원

#### 접대문화 NO,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 공직자 등의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민원 등 특정 행위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법한 부정청탁, 금품 수수는 소속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ac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